정치 > **국방・외교**

개성 연락사무소도 재정비...계속되는 교류협력 재개 준비

김연철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19 속 새 도전 이길 수 있어"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20-06-04 06:30 송고

지난 1월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개성 인력사무소에 체류하던 남측 인력들을 태운 차량이 빠져나오고 있다. ©News1 이동해 기자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의 무호응 속에서도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기반 닦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지난달 2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룹웨어 도입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고를 내고 오는 11일까지 희망 사업자들의 입찰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연락사무소와 통일부 간의 호환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차원으로, 일종의 내부통신망의 재정비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결재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메신저와 메일, 게시판 위주로 구현됐던 메신저 소프트웨어 및 자료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시간 협업 및 소통 기능을 통한 효율적인 협업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의 시스템 교체가 주목되는 이유는 현재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가 지난 1월말부터 비어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지난 1월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무실을 잠정 폐쇄했다. 이후 남북은 전화·팩스선으로만 연락사무소 연락 업무를 하루 두 차례 이어오고 있다. 연락사무소의 재개 시점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복귀할 때를 대비해 시스템 정비 작업이라도 우선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교류 협력을 위해 해야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들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독자적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기업이 남측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동해 북부선 연결사업 시동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북한을 향해 공동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북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호응을 보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수차례 보낸 보건·방역 협력 러브콜은 물론이고, 최근 잇딴 정부의 움직임에도 북한 당국은 묵묵부답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양한 협력 모색을 구상하고,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남북 공동 협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전날(3일)에도 김연철 장관은 파주 소재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을 방문해 남북 산림 협력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의 산림은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맞서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남북이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을 재개하고,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새로운 도전들과 직면할 것이다. 연대와 협력만이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남북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성 연락사무소 시스템 교체를 위한 해당 사업 기간은 총 60일이며 사업비는 5860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